

하기 서명한 전 세계 풀뿌리 단체 및 활동가들은, 1930년대부터 세계 제 2 차대전 말까지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군 성노예 제도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. 이 여성들은 완곡한 표현으로 "위안부"라 알려져 있다. 1991년 8월, 김학순 할머니가 용감하게 침묵을 깬 후, 한국, 중국, 대만, 필리핀 등 여러 국가 출신의 이 여성들은 – 우리는 그들을 애정을 담아 할머니라 부른다 – 운동단체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인식을 높이면서, 이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고 폄하하고 지우려는 일본정부의 끝없는 시도에 대항해 왔다.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요구사항을 작성한 바 있다.

1. 범죄 사실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정
2. 공식 사죄
3. 직접적이고 법적인 배상
4.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
5. 범죄자에 대한 기소
6. 일본의 공립학교에서 지속적 교육
7. 박물관 및 추모비 건립

2015년 12월, 일본과 한국정부는 서로 공모하여, 이 문제를 끝내면서 "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" 해결한다고 주장하는,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합의에 도달하였다. 그러나 이 합의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한국인 생존자들조차도 철저히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, 다른 어떠한 피해국 생존자에 대한 고려도 없었으며, 위의 일곱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반영되지 않았다. 활동가 할머니들은 즉각 이 합의 전체를 무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, 전 세계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빠짐없이 한 목소리로 할머니들과 함께 아베와 박 정권 사이의 거래를 사기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.

2015년 합의 이후, 일본 정부는 – 특히 미국에서 – 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벌여 왔다. 그들은 애틀란타 및 샌프란시스코, 그리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이르기까지 기림비 건립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. 일본정부는 미국 교과서 편찬과 커리큘럼 개발에까지 방해시도를

했다. 사실상, 일본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주도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데에 2015년 합의를 이용해 왔다.

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현재의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과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. 그리고 그 재협상에는 생존자들의 일곱가지 요구사항 및 국제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.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이 재협상에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.

- 1) 모든 피해국 출신의 활동가 할머니들이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, 그들의 요구와 우려사항이 협상조건인 핵심이 되어야 한다.
- 2) 정대협, 나눔의 집 등 모든 주요 할머니 옹호단체들과 주요 활동단체 및 개인들도 협상과정에 적극 관여하여야 한다.
- 3) 각 피해국 정부도 참여하도록 초청하고, 불참을 원하는 경우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4)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된 할머니들의 일곱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핵심은 시간이다. 매달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, 정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의를 부인하는 것이고, 시간이 지체될수록 생전에 해결을 볼 수 있는 할머니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. 본질적으로 이는 인권문제이며, 할머니들께 정의를 가져오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성적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.

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문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더이상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.